

2018년 업무보고 자료

'18년 업무보고서

국 방 부

목 차

I. 2017년 성과와 평가	1
II. 안보상황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방향	6
III.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	7
1.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	8
2.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	10
3.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	12
4. 국민과 함께하는 軍,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	17
IV. 공통과제 추진계획	20
1. 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 정책	21
2.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(타협) 과제	22
3. 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	24
4. 근무혁신 추진계획	26
【붙임】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	27

I. 2017년 성과와 평가

□ 총 평

- (추진 여건) 北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軍의 실질적 대응능력 구비와 '강한 안보, 책임 국방' 구현이 시대적 요구로 부각
- (추진 평가)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「국방개혁 2.0」 계획 수립을 통해 국방개혁의 추진 토대 마련

□ 추진 실적 및 성과

-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한 「국방개혁 2.0」 계획 (안) 정립

국방 체질개선을 통해 싸우는 방법 중심의 정예화된 국군 건설

- '국방개혁추진단' 가동 (9월), 「국방개혁 2.0」 국방개혁안 발전
- 「국방개혁 2.0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4대 중점분야* 핵심과제 41개 선정 (12월)
 - * ① 군구조 개혁, ② 국방운영 개혁, ③ 방위사업 개혁, ④ 병영문화 개혁
- 병력 위주의 양적 軍 구조를 정예화된 질적 軍 구조 개편안 수립
 - * 상비병력 감축안 확정 ('22년 52.2만 → 50만), 민간인력·여군 확대 등

- 北 핵·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우리 軍의 독자적 대응능력 강화

자주국방 역량 강화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

-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한국형 3축 체계 (Kill-Chain, KAMD, KMPR)' 조기 구축 추진
 - * '18년 국방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5,509억원 증액 (14.5% 증가) 반영
-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
 - * 합참 內 '핵·WMD 대응센터' 신편 ('17.1.1부),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신편 (12월)
-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 및 재정개혁 추진
 - * 핵심전력 조기 확보,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국정과제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'18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.0% (2조 8,234억원) 증액

○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

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해 책임국방 실현

- 한미 정상 간 '전작권 전환 가속화' 합의(6.30.)에 따라 한미 주요협의체(SCM 등)를 통해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 합의
* '18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
-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'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' 초안을 한미안보협의회(SCM) 보고(10.28.)
- 한국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연합평가단 공동평가 실시(8~10월) 및 4개 분야(정보·작전·군수·통신) 필요과제 한미 협의(9월, 154개→146개)

○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제 확립

문민 개방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국방경영효율화 추진 기반 구축

- '09년 이후 최대 증가율(7.0%)의 '18년 국방예산(43.2조 원) 확보, 「국방개혁 2.0」 추진 초석 마련
* 국방예산 증가율 : ('09년) 7.1% → ('13년) 4.2% ('14년) 4.0% ('15년) 4.9% ('16년) 3.6% ('17년) 4.0%
- 군수지원 병력·부대 감축에 대비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 확대
* 근무지원분야 민간위탁(12개 부대), 軍 주거시설 관리 위탁 시범 사업 추진 등
- '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'을 위해 쏘 기관 소통·협업의 공감대 형성 및 동참 의지 고취
* 전체회의·자문(3회), 관련기관장 보고(19회), 관련기관 방문/토의(13회)
-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근무환경 조성
*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, 성실수행인정제도 등 법령 개정(12건)

○ 방위사업 비리 근절·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구축

투명·청렴한 방위사업 추진환경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

- 방위사업법령 개정으로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·제재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
 - * 방산업체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 부과 강화 (1배 → 2배), 청렴서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강화 (최대 2년 → 5년) 등
 - *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확대,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, 방추위 민간위원 확대 등
- 「방위사업개선 TF」를 설치 (11월) 하여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

○ 국민과 함께하는 軍,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

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척결과 장병 체감 복지 증진, 자기개발 지원 강화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

- 주기적 진단과 상·하 공감대 형성으로 병 자살사고를 포함한 인명사고, 군무이탈 현저히 감소
 - * 병 자살(40건('14년) ⇨ 17건('17년)), 군무이탈(418건('14년) ⇨ 143건('17년))
- 병영생활 필수경비를 보장하고 전역 시 1개 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토록 병 봉급 연차적 인상
 - * '18년 병 봉급 인상(병장 봉급 기준) : 216,000원 → 405,700원 (↑87.8%)
- 의·식·주에 대한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·급식 및 피복·장구류 개선
 - * 병영생활관 : '17년 35동 개선
 - * 신세대 취향고려 급식혁신 시범사업 추진, 신형 피복·장구류 보급 등
- 복무중 학점·자격증 취득, '군 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' 등 학업·경력 단절을 해소,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기여
 - * '16년 134개 대학 → '17년 141개 대학 (원격강좌 개설대학 기준)
 - * 軍 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을 위한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('17. 11월)

○ 군사법 제도의 전향적 개편

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고,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군사법 개혁 추진

-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('17.7.7.부 시행)
 - *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(기존 84개→ 31개 보통군사법원으로 축소)
 - * 심판관제도 제한적 운영,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(1/3미만 감경)
- '16년 군사법 제도 개선 내용과 연계하여,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추가 '군사법 개혁'을 추진
 - * 개혁과제 : ① 민간법조인력 중에서 군판사 선임 ② 군검사와 군판사 순환보직 제한 ③ 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
- 지속적인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이 있어왔던 영창제도 폐지 추진
 - * 군인사법 개정안 (의원발의) 국방위 통과 (9.20.), 법사위 심의 중

○ 5·18 관련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 철저

5·18 당시 헬기사격/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국방부 차원 진상조사와 5·18 관련 전면적·실효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

- 5·18헬기사격 의혹 및 전투기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조위 활동
 - * 자료조사 (60만쪽), 현장조사 (190개 부대·기관), 면담조사 (110명) 실시
 - *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(2.8. 예상), 백서발간 및 기록물 존안 (~ 4.30.)
 - *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시 특조위 조사결과 및 수집 기록물 전량 이관
- 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」 제정 추진
 - * 국회의원 발의 「5·18민주화운동 특별법안 (4개 법안)」 국회대안 마련
 - 국방위 계류 중 (2월 중 청문회 개최 및 국회통과 예상)
 - * 특별법 국회통과 대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단 (TF) 구성 예정 (2월)

○ 軍의문사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

軍의문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

- 차관직속의 「軍의문사조사·제도개선추진단」 설치 : '17. 9월
 - * 전향적 문제인식, 유가족과 소통의 장 마련(7월, 11월)
 - * 軍의문사 적극 해결을 위해 사건 재조(수)사 및 순직재심 진행
- 軍 수사 신뢰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검토 / 시행
 - * 중요 사망사건의 수사권한을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로 이관
 - * 초동수사, 재조사 및 수사 시 유족측 외부전문가 참여
- 軍사망자 '순직-안장-보상' 까지 원스톱 (ONE-STOP) 행정지원
 - * 보훈처 협업을 통한 심사자료 공유 및 심사기준 개선 추진 중
 - * 軍 복무중 사망·상이자 심사, 재조사 및 보훈보상 신청서류 간소화

○ 신홍무관학교 등 독립운동史 발굴 및 활용

國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·정통성 확립,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조의 애국정신 선양

- 軍사편찬연구소 연구 결과, 독립군과 광복군은 우리 軍의 기원임을 확인
 - * 「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國군」 연구편찬 : '18. 1월 중 배포
- 각군 사관학교 및 장병교육과정에 반영, 교육 ('18. 3월)
- 심층연구를 통해 軍 역사서인 「國防史」에 수록 추진 ('18. 12월 한)

II. 안보상황 평가 및 2018년 업무추진방향

□ 안보상황평가

- (국제) UN안보리 결의안 (2397호) 채택 등 강력한 對北제재·압박 추진
 - 美·日은 독자적 제재, 군사적 옵션 거론 등 北을 최대한 압박
 - 中·러는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, 원유공급제한 조치
 - (북한) 핵무력 완성 기정 사실화, 군사적 긴장완화 시도
 - 對美 전쟁 억제력 확보차원의 핵·미사일 능력 강화 지속, 비핵화 협상 여지 배제
 - 평창 올림픽 참가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, 美 전략자산 전개 중지 요구 등 한미공조 이완 시도
 - (국내) 北 도발과 軍 관련 사건사고 등으로 對軍신뢰도 매우 저조
 - 국방개혁 및 장병인권 보장 관련 軍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병존
 - 北 도발 대비 우리 軍의 대응 능력과 태세 구축에 관심 지대
 - 사격장 총기사고, 버스 추락사고 관련 軍의 안전조치에 대한 불신 다대
- ※ 대비태세 유지, 국방개혁 추진, 안전한 병영 시스템 구축 등 적극 추진 필요

□ '18년 업무 추진방향

-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
 - *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, 북한 핵·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등
 -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 협력 증진
 - * 한미동맹 강화,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, 주변국들과 국방교류협력 강화 등
 -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
 - * 「국방개혁 2.0」 기본계획 수립 (3월), 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증강 추진 등
 - * 국방예산 증액 노력 강화, 방위사업 비리 척결, 국방부 문민화 추진 등
 - 국민과 함께하는 軍,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
 - *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, 장병 인권보호 강화, 軍 의료시스템 개편 등
- ※ 軍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여 '강한 안보 책임 국방'을 구현

Ⅲ.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□ 국방운영 목표

- 혁신하는 국방
-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

□ 국방운영 중점

- ①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
- ②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
- ③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
- ④ 국민과 함께하는 軍,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

1

튼튼한 국방태세 확립

□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

○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

- 對北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,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, 접적 지·해역 합동작전태세 확립
 - * 위기관리 훈령 및 표준·실무매뉴얼 개정 (1월),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운용 정착, 드론 포함 북 무인기 태세 확립 (탐지 및 타격전력 지속 보강)
-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으로 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태세 확립
 - * '18년 화랑훈련 : 5개 권역 (부산·울산, 인천·경기, 충북, 전북, 경남) 내실화

○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

- 국방개혁과 연계한 작전개념과 한미 연합 작전계획의 지속 발전
 - 접적지역 전투준비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·훈련 강화
- ※ 평시 능동적 억제, 유사시 전승보장의 국방태세 확립

□ 국내·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

○ 軍 대테러 체계 발전 및 역량 강화

- 軍 대테러 법령·제도 개선을 통한 기관·부대임무·책임 명확화
 - * 「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」 개정 (3월), 「국방부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 신규 작성·발간 (4월) 등
- 첨단 대테러 장비·물자 확보 및 전력화
 - * EOD로봇 (EOD·EHCT 부대), 화생방 자동 시료채취기 (CRRT 부대) 등
- 국가안보망 추가 가설 (1월), 軍 관계기관 정보협의회 운영 (수시)

○ 안전한 평창 올림픽·패럴림픽 개최 지원

- 평창 올림픽·패럴림픽 대테러·안전, 외곽 경계 지원 ('17. 11. ~ '18. 3.)
- 올림픽·패럴림픽 기간 테러경보 상향, 전군 강화된 경계태세 유지
 - * 개최 7일 전 (1단계 관심 → 2단계 주의), 개최 3일 전 (2단계 주의 → 3단계 경계)

○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참여 및 국방 사이버위협 지속 대응

- *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 따른 국방부 시행계획 작성 추진 ('18년)
- * 관계기관·부대별 임무 재정립, “국방 사이버정책 발전계획” 수립 (1/4분기)

□ 북핵·WMD 위협 억제·대응능력 강화

○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

- 공세적 新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「한국형 3축체계 개념」 보완
 - * 「국방개혁 2.0」 추진과제와 연계
- 3축체계 조기·적기 구축을 위한 최우선 예산반영 ('19~'23 국방중기계획)
 - * (Kill Chain) 북한 쏠지역에 대한 징후탐지·식별 및 타격능력 향상
 -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, 타우러스 (추가) 등
 - * (KAMD) 탄도탄 탐지 및 요격능력 향상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
 - 패트리엇 및 M-SAM 성능개량, L-SAM 연구개발 등
 - * (KMPR) 핵심지역 파괴를 위한 타격 전력 확보, 전담부대 침투수단 및 작전수행능력 보강 (특임여단 등)
- 방위력 개선비 비중 향상,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
 - * 방위력 개선비 비중변화 (안) : '18년 31% → '19년 33% → '23년 37%
- 3축체계 관련 전력 확보 사업 추진
 - Kill Chain : 軍정찰위성 체계개발 착수, F-35A 美 현지 인수, 자항기뢰 양산 계약 등
 - KAMD :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-II 계약 등
 - KMPR : 특수작전용무인기 입찰 공고, 양안형야간투시경·산탄총 구매 시험평가 등

○ 북한 핵·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

- 실질적 억제·대응방안 연습·숙달 및 美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 방안 등 대응전략 마련
 - *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본 회의 실시 (3월, 9월), 2+2 외교·국방 장관회의 개최 (10월),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(TTX) (6월)
- 한미 동맹의 미사일 대응 (4D) 능력·태세 발전
 - * 국제협력 기반확대를 위한 님블타이탄 연습 지속 참여 (3월, 5월, 9월)

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

-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
 - 기존 ‘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(COTP)’ 보완 (‘18. 10월)
 - *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한 로드맵 수정·보완
 - ‘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추진지침’ 韓美 공동 발전 (‘18. 10월)
-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미래지휘구조 운용기반 구축
 -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(안) 한·미 합의 추진 (‘18. 5월)
 - * 한국군 4성장군을 사령관,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, 現 연합사와 유사한 지휘·참모체계 유지
 - 임무수행을 위한 근거문서 초안 완성 (‘18. 12월)
 - * 연합 예규, 연합 작전지침서 등
-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능력 지속 확보
 - 한국 핵심군사능력 확보계획 재검토 (‘18. 6월)
 - * 검토결과를 고려 ’19년 예산, 중기계획, JSOP 등 조정 소요 판단
-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 및 검증 준비
 - 연합연습 및 검증시기 조정 추진 (‘18. 5월)
 - * ’19년도 既계획된 검증이전평가(Pre-IOC) 생략, ’19년에 1단계 검증(IOC) 시행 관련 對美 협의
 - 1단계 연합검증 세부계획 발전 (‘18. 12월)
- 軍內·外 지지여론 확산 및 공감대 형성
 -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홍보 활동 시행 (계속)
 - * 軍內: 부대별 순회교육, 학교기관 정과교육 등
 - * 軍外: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, 정책자문위원 등
 - 對국회·對국민 이해증진 노력 강화

□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강화

- 북핵·미사일 위협 억제·대응과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협력 확대 및 국제사회 협력을 공동 견인
 - *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, 한·미·일 안보협력, 다국간 연합훈련 등
-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·관리
 - * 연합사 본부 이전, 방위비 분담,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,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
- 우리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동맹 협력 확대
 - * 첨단 군사자산 획득·개발, 방산·국방과학기술, 우주·사이버 협력 등
- 美 '인도-태평양 전략'과 우리의 아태지역 국방외교간 가능한 협력을 모색
 - * 우리의 '新남방정책'과 조화, '新북방정책' 지원 위한 공감대 형성 등

□ 전략적 국방외교·협력 강화

-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변국들과 국방교류협력 증진
 - 한·중, 국방교류·협력 복원 및 전략적 소통 강화
 - * 장·차관급 고위급회담 추진 및 장관 간 Hot-Line 활용 전략적 소통 강화 추진
 - 한·일, '투 트랙' 기조 下 국방교류·협력 추진
 - *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
 - 한·러, 기존 국방교류·협력 점진적 확대 발전
 - * 軍 고위급 인사 교류 등 국방교류·협력 적극 추진, '新북방정책' 지원
- 北핵·미사일 억제를 위한 주변국 / 다자차원의 적극적 지지 확보
 - ASEAN과 다자안보협력 강화로 안보분야에서 '新남방정책' 지원
 - * 한-ASEAN 국방차관회의 정례화 추진
 - '서울안보대화'를 역내 영향력 있는 다자안보협력 대화 채널로 위상 제고
- 호주·인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, 대양주·인도양 지역 국방협력의 거점국가로 활용
 - * 고위급 인사교류 (한·호 국방장관 회담, 한·인도 외교·국방(2+2) 차관회의)

3

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

□ 「국방개혁 2.0」 강력한 추진

- 문재인 정부의 '책임국방'을 구현할 수 있는 「국방개혁 2.0」 계획 수립, 추진
 -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북핵 위협 억제·대응능력 확보
 - 新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군구조 개편 (전작권 전환 연계)
 - 인력운영체계 개선 등 국방운영의 효율성·투명성 확보
 - 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 혁신 (기관별 역할 재정립, 비리 예방 시스템 구축)
 - 복무여건 및 사법제도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
- 「국방개혁 2.0」 기본계획 수립, 검증 및 조정 : '18. 4월 한
 - * '19년 예산 편성, 법령 개정 소요 판단 및 개정 절차 이행 : '18. 4~12월
- 국내상황 등 제반여건 고려, 단계별 홍보주제 선정·추진
 - * 1단계 ('18. 1~2월) : 국민이 관심 갖는 병영생활 개선 과제 위주 홍보
 - * 2단계 ('18. 3월~) : 계획 완성 후 군구조·방위사업분야 홍보

□ 50만명으로 병력 감축 및 작전·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

- '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
 - 육군 위주 감축, 해·공군 및 해병대는 현 수준 유지
 - * '17년 61.8만명 → '22년 50만명 (육군 48.3만명 → 36.5만명, ↓11.8만명)
 - '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시 군무원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전투력 유지
-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
 - 군수·행정·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인은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로 대체
- 장군정원 감축 및 계급 적정화 추진
 - 「국방개혁 2.0」에 따른 부대개편과 연계, 큰 폭으로 감축

□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

○ 실질적 문민화 추진

- 예비역으로 보임해 온 실·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
* '18. 1월 5개 직위 대체 완료
- 국·과장급 현역직위(7개/24개)에 대한 추가 문민화 대상 직위 식별(3월)

○ 문민화 제도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

- 예비역은 전역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임 가능토록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 설정, 국방개혁법에 명시
* 보임제한 기간은 미국 사례, 현역·공무원 정년, 인사혁신처 지침(3년) 등 고려 설정
-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* 군령보좌 기능 강화 등
- 일반직공무원의 안보·군사 분야 전문역량 강화

□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(육군·해병대 기준)

-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 추진
(육군·해병대 기준)

□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(「국방개혁 2.0」의 성공적 추진 뒷받침)

- 국방개혁 핵심과제 조기 추진을 위한 국방예산 확보 및 배분

- '19년에도 충분한 국방예산을 확보하여 국방개혁 추진 동력 유지

- 방위력개선비 비중 향상, 복핵대응체계 조기 구축(핵심과제 적극 추진)
* 방위력개선비 비중 변화(안) : '18년 31% → '19년 33% → '23년 37%

- 비전투분야 군인을 군무원·민간근로자로 대체, 인건비 절감

- 재정개혁 과제 적극 발굴·추진으로 예산·조직·인력 효율화

* '17년 총 22개 과제 추진으로 1,501억 원의 예산 및 381명의 인력 절감

* 차관 주관 재정개혁추진단회의 확대(월 1회), 대국민 재정개혁 아이디어 공모

□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강구

- 軍·産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 대책 고도화
 - 방산브로커 제도적 관리 및 퇴직공직자 관리 등 유착근절
 - * 무역대리점 등록정보 신뢰성 검증, 컨설팅업자 신고제 정착·발전, D/B구축,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관리, 방위사업청 문민화 추진 등
 - 방위사업 전 단계 취약점 보완 및 비리발생의 연결고리 차단
 - * 방위사업 참여자의 행동기준 정립, 관련 기관 간 소통·협업체계 개선 등
- 방위사업 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·벌의 균형 추진
 -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방안 마련
 - * 악의·고의적 비리는 강력 엄단하되, '실패의 교훈'이 인정되는 업무환경 조성
 - 방위사업 종사자 적정 인센티브 부여
 - * 방위사업 수당 신설, 획득형 장교 정년연장 등

□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개선

- 책임국방 구현이 가능한 소요기획, 예산/획득 관리체계 구축
 - 방위사업 일관성 확보 및 작전수행개념 기반의 소요기획 추진
 - * 군사력건설 관련 국방부 정책기능 강화, 개념연구 도입 및 소요검토 강화, 진화적 사업관리, 개략적·범위형 소요로 전환 등
 - 방위력개선, 전력운영 체제의 연계 및 신속획득 제도 보완
 - * 총수명주기비용 분석 및 검증체계 구축, 국방획득 대상기간 기준 재정립, 중기계획의 여과기능 강화, 사업관리 연구개발 체질 개선 등
- 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
 - 획득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심의·의결, 조정·협의제도 정립
 - * 국방부-방사청간 지휘/감독 관계 정립, 심의·의결제도 재정립 등
 -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
 - * 투명성·개방성 강화, 정보화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

□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

○ 국방 R&D 체계 개선 및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

-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 조성 및 개방형 R&D 체계 강화
 - * R&D 수행방식 전환(계약방식 → 협약방식), 성실수행인정제도 본격운영 및 확대 검토
-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국방기술 개발 추진
 - * 63개 미래국방기술 및 40개 신개념 무기체계 제시 (방사청·기품원, '17.12월)

○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방산수출·일자리 창출 지원

- 기술·품질 중심의 방산환경 조성 및 수출·일자리 지원을 위해 방산육성 5개년 기본계획('18~'22)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추진
 - * 제안서평가 시 기술·품질 비중 확대, 수출 품목·방식 다변화 등

□ 선진 민간 기술과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군수지원 효율성 향상

○ 우수한 민간기술 및 경영기법 적용, 군수지원 시스템 선진화

- 우수 기술·제품을 발굴, 국방분야에 적용 확대
 - * 국방분야에 활용 가능한 품목 시장조사, 상용화 가능 품목 발굴
 - * 국방부 업체 설명회(연 2회/2월, 7월), 각 군별 자체 설명회(수시)

-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기반 정부·민간 연구소와의 협업체계 구축

○ 전투지원 병력과 조직 감축에 따른 민간자산의 군사분야 도입 확대

- 비전투분야(주거시설 관리, 세탁, 물자정비 등) 민간위탁 확대
 - * 주거시설 민간위탁 시범 발족(1월), 세탁·물자정비 위탁: 15개 부대(~'19년) 등
- 민·관·군 연계 수송·항만·항공 등 사회기반체계 통합 활용

4

국민과 함께하는 軍,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

□ 병 봉급 인상과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

- 병 봉급 : 외부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1개 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차적 인상
- 병 봉급 인상 고려 「국군장병 희망적금」 월 적립한도 인상 추진 : '18년
* 적립한도 : KB·IBK 은행별 각 10만원 → 각 20만원으로 인상(최대 40만원까지 저축 가능)
- 병영생활 필수경비 절감을 통해 병 봉급 인상 효과 극대화
* 1일 급식비 인상, 일용품 추가보급 등 의·식·주 및 자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

□ 군 급식 '질' 향상,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한 품질개선

- 現 급식 조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·안정적 조달방안 도출('18년) 및 적용('19년)
* 농·수·축산물 관련 장기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문제 해소
- 피복 및 개인장구류에 대한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적기 보급을 통해 개선효과 증대
* 신형 장구류 조기 확보 추진 : 방탄헬멧, 전투조끼, 개인천막 등

□ 軍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확대

- 軍 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 추진 및 軍 복무간 단절없는 학업지원
 - 교육적 경험(리더십, 사회봉사 등)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토록 제도 마련
 - 다양한 학습경로를 통해 장병들의 학습욕구 충족
* 고졸 검정고시, 대학원격강좌, e-러닝 수강, 국가기술자격 군내 검정 등
- 軍 경력의 사회적 활용성 증대
* 軍 복무간 자원봉사 실적, 국가자격 취득 시 실무경력 인정 확대 추진

□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

○ 여군의 양적 및 질적 성장기반 마련

- 연차적 초임획득 인원 확대 ('22년에 간부 정원의 8.8%까지 달성 목표)
 - * 초임 획득: '17년 1,098명 → '18년 약 1,500명
- 여군 인력 활용성 연구용역 추진 (KIDA, '17. 10월 ~ '18년 2월)
 - *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('18년 3월)

○ 여군 역량 발휘를 위한 제반 여건 보장

- '임신·출산·육아' 지원 강화,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
 - * 軍어린이집('17년 130 → '18년 144개소), 공동육아나눔터('17년 21 → '18년 28개소) 확충
-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
 - * 양성평등센터 기구 강화, 민간 상담관을 2배 수준으로 확대(現 23명 → '18년 44명)
-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(GOP 및 해·강안 부대 등) 및 여군 편의시설 확충

□ 軍 의료시스템 개편

○ 전투임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軍 의료역량을 강화

- 전방군단 지원 군병원은 유지, 민간병원 이용 용이한 후방 군병원은 통·폐합
- '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추진(총 8대 / '19년 4대, '20년 4대)

○ 민·군 협력 등으로 장병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

- 국군수도병원에 외상센터 설립, 민간병원과 협업하여 진료역량 획기적 개선
- 사단 의무대 이하 의료인력 증편, 병사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

○ 전시 의무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시 대비체제 보강

- * 기동화 의무시설, WMD대응 등 민간 확보가 제한되는 자원은 전력소요 반영

□ 장병 인권보호 강화

- **군의원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**
 - 차관직속 ‘**군의원사조사·제도개선추진단**’ (‘17. 9. 1.) 적극 운용
 - 미인수영현 등 군의원사 재조사 및 조기 재심 추진
- **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 개선**
 - 병 징계 방법 개선을 위한 **군인사법 개정안 발의** (‘17. 3. 15.)
 - * 징계 다양화 : 군기교육, 감봉, 견책 추가(現 강등, 영창, 휴가제한, 근신 등 4개)
 - **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방법 연구용역 진행** (‘18. 1월, 한국형사정책연구원)
- **軍 법규의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현안에 대한 외부 자문 강화**
 - *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‘**국방부 軍 인권자문위원회**’ 운영

□ 군 사법 개혁

- **‘군판사 인사위원회’ 설치** (~ ‘22년)
 - * 군판사의 임명·연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정·투명하게 심의
- **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** (~ ‘22년)
 - *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 개입을 차단하고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
- **군범죄 피해자 및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 추진**
 - * 군내 사망사고 유족과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장
- **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 도입 추진**
 - * 군 수사 독립성·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 인권보호

IV. 공통과제 추진계획

① 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 정책

- 국방 R&D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

②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(타협)과제

- 軍 공항(대구·수원·광주) 이전사업 추진
- 영평사격장(美 로드리게스사격장) 갈등관리

③ 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

-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대민지원태세 확립
- 군내 자살예방 활동

④ 근무혁신 추진계획

-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활성화 및 협업 강화
- 창의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명사강연 운영
-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제도 혁신

1

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 정책

□ 국방 R&D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

○개 요

첨단 무기체계 국내연구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 기반 마련

○추진 방향

- 국방 R&D 역량 강화로 첨단무기 국내개발 기반 구축
- 업체주도 국방 R&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
- 방산 중소·벤처기업 육성으로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

○주요 내용

- 국방 R&D 혁신을 통한 R&D 기획·수행체계 개편 추진 및 「국방과학기술·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」 제정(안) 마련
 - * 합참 소요기획 시 기술지원 절차 정립, 수행체계 재구조화, 국방기술 기획·평가 기관 및 방산육성 전담조직 신설 추진
- 무기체계 개발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‘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’ 도입으로 유연한 기술개발 기반 마련
 - *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 미래도전기술개발 과제를 기획·관리하는 전문기관 설치
- 부처 연계성 국방R&D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
 - * 과기정통부와 국방 기초·원천분야 R&D 협업, 다부처 중점 프로젝트 발굴 등
- 업체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 마련 및 국방 R&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
 - * 협약 방식으로 전환 검토, 국과연 보유 시험시설·장비 개방 확대
-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용 개조·개발을 지원하여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

○향후 일정

- 미래도전기술개발 도입을 위한 「방위사업법」 개정('18. 12월)
-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진흥 관련 법률 제정(안) 마련('18. 12월)
-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 사업 착수 및 관련 제도 개선('18. 하반기)

2

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(타협) 과제

□ 軍 공항(대구·수원·광주) 이전사업 추진

○ 개 요

「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'기부대 양여' 방식으로 대구·수원·광주 軍 공항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전 추진

○ 추진상황

- (대구) 군위, 군위 / 의성, 2곳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('17.2.16.) 후 지자체간 유치 경쟁 중
- (수원) 화성시 화옹지구 1곳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('17.2.16.) 후 화성시는 軍 공항 이전을 지속 반대하며 모든 협의 거부 중
* 헌법재판소, 화성시가 협의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청구 ('17.4.14.) 한 '권한쟁의 심판'을 부적법 사유로 각하 ('17.12.28.)
- (광주)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으로 표면화된 갈등은 없으나, 전남도 및 지자체가 軍 공항 이전에 미온적 입장

○ 향후 관리방향

- 지자체·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 조성
-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우호적 여건 조성

- (대구) 제1차 대구 軍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권고 ('17.12.15.)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4개 지자체 (대구시, 경북도, 군위·의성군) 간 합의를 진행 중
* 합의 결렬시 선정(실무)위원회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추진
- (수원) 화성시와 軍 공항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공감대 확산 후 이전후보지 선정절차 추진
- (광주)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前 전남도내 우호적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, 공군의 작전성 검토 후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추진

□ 영평사격장(美 로드리게스사격장) 갈등관리

○ 개 요

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도비탄 발생을 차단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, 갈등을 해소하여 미군의 사격훈련 여건 보장

- * 사격장 설립 : '54. 5. 20. / 포천시 불무산 일대 약 1,700만㎡
- * 주한미군, SOFA 규정에 의거 부지를 공여받아 사용 ('54. 5월)
- * 훈련 범위 : 중대급 제병협동훈련 (전차, 헬기 사격 등 쌍방훈련 가능)

○ 추진상황

- 국방부 갈등관리 과제 선정 ('15. 1월)
- 사격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, 포천시사격장 등 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발기인 구성 ('15. 10월)
- 韓美 연합훈련 조정협의회 MOU (국방부 - 美 8군) 체결 ('16. 9월)
- 국방차관, 대책위 / 지역주민 간담회 (5회, '17. 3월 ~ '18. 1월)
- 대규모 집회 (4회), 청와대 건의문 (3회) 제출 ('17. 4, 6, 8, 12월)
-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,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과제화 ('17. 8월)

○ 향후 관리방향

- 사격장 안전 위해요소 제거, 주민 피해위험 최소화 (美 8군 협의)
 - 도비탄 발생 방지
 - 사격전 안전교육 / 사격장 재설계 검토 (사격진지 / 표적 재조정 / 삭제 등)
 - 야간사격 최소화 및 사격시간 조정, 해외 순환부대 사격 최소화
- 시스템 및 제도 마련 (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및 대응)
 - 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화
 - 정책적 결정 및 법률적 지원
 - *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역주민 이주대책 검토
 - *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지원 검토
 - * 정부 부처별 지원 가능 사업 발굴 및 지원대책 협의

3

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

□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대민지원태세 확립

○ 개요

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도 軍의 임무라는 인식 하에,
 각종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
○ 추진 방향

- 각종 재난 (AI, 지진, 호우, 선박사고, 가뭄 등) 발생 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軍 인력·장비 적극 지원
- 유사시 대비 지원사항을 사전 준비하여 각종 재난 대비태세 유지
 - * 재난구조부대 (가축 살처분·폭발·붕괴·화재) : 육군 각 지역별 6개 특전여단
 - * 탐색구조부대 (선박·항공기 조난사고 시 인명구조 지원) : 해군 6전단, 공군 5비, 육군 함작사·특전사 등 17개 부대

○ 주요 내용 ('17년 사례)

- 가축질병(AI) 발생지역 방역활동 지원 (1. 1. ~ 12. 31.)
 - * 전국적으로 병력 93,042명, 장비 3,279대 지원 (살처분, 도로방역, 거점소독시설, 이동통제초소, 농가 잔존물 처리 등)
- 지진 피해 복구 지원 (11. 15. ~ 12. 8.)
 - *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병력 5,801명, 장비 215대 지원
- 호우 피해 복구 지원 (7. 16. ~ 8. 4.)
 - * 청주·괴산·천안 등 집중호우 지역 피해 복구, 임시교량 설치 등에 병력 35,921명, 장비 538대 지원

※ 주요 대민지원 현황 ('17. 1. 1. ~ 12. 31.)

구분	계	AI	지진	호우	가뭄	산불	폭설
인원(명)	173,216	93,042	5,801	35,921	3,072	23,707	11,673
장비(대)	5,843	3,279	215	538	1,198	169	444

○ 향후 일정

- 국가적 재난 발생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(계속)
- 각종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민지원 실시 (수시)

□ 군내 자살예방 활동

○개 요

軍 전투력 저하 및 대군불신을 초래하는 군내 자살 예방을 위해
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

○추진 방향

- 복무 부적응 및 자살 징후 조기식별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
- 병영주도계층 역량 강화를 통한 자살예방 교육·상담의 실효성 제고
- 軍 자살자 심리부검 활성화 및 장병 행동·심리 연구 추진

○주요 내용

- 자살예방활동 주도계층 교육 강화 및 활동여건 조성
 - * 대대급 이하 지휘관·참모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및 학교교육 강화
 - * 병영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및 복무여건 향상 (우수자 포상, 처우개선 등)
 - * 부대별 전담교관 양성교육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보수교육 강화
-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간부 인성검사 강화
 - * 초급간부 (위관장교, 하사 ~ 상사) : 연간 실시횟수 확대 (1회 → 2회)
 - * 중견간부 (영관장교, 준사관, 원사) : 자가진단 중심 인성검사 도입(연 1회 이상)
- 각 軍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, 병영상담관 증원 등
효과적인 자살예방활동 인프라 구축 추진
 - * 병영생활전문상담관 (연대급→ 대대급) : '17년 383명 → '23년 656명
 - * 국방헬프콜센터 (국방부 조사본부 內) : '17년 17명 → '19년 21명
- 자살사고 발생 시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한 「부대관리훈령」 개정,
KIDA 내 「장병 행동심리연구소」 설립 추진 (~'19년)

○향후 일정

- 각 軍별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('18년)
 - * '18년 전반기 中 육·해군버전 개발 착수 (공군은 '17년 완료)
- KIDA 내 '장병 행동심리연구팀 (가칭)' 발족 ('18.1월)

4

근무혁신 추진계획

□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활성화 및 협업 강화

- 소통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중형 간 소통의 장 활성화 추진
 - * 업무유관부서 간 업무협의를 위한 ‘크로스미팅’, 직급별 / 업무담당자별 / 실·국별 소통워크숍, 전사 체육대회 등
- 직원 연구모임인 ‘두드림 (Do Dream) 마당’을 구성,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정책 추진 아이디어 발굴
 - 동기 단위 A팀 (10명), 국별 대표 B팀 (15~20명) 운영 (3개월 단위)
 - * 차관 주관 월 1회 정기 모임, 월 2회 이상 자체 모임 (조사, 토의, 벤치마킹 등)
 - 도출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토의·조정을 거쳐 반영

□ 창의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명사강연 운영

- 다양한 분야의 명사 강연을 통해 직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내 아카데미 운영
- 균형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류 탐구 및 기반지식 강좌, 인문학 강좌 등 2개 부문 강연 병행
 - * 사회적 시류 탐구 강좌 : 정치·경제, 새정부 국정철학, 4차 산업혁명 등
 - * 인문학 강좌 : 문학, 음악, 미술, 철학, 공연예술, 심리학, 건축학 등

□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제도 혁신

-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사용 활성화 목표 상향
 - 초과근무 연도별 감축율 : '16년 6.23%, '17년 8.76%, '18년 목표 10%
 - 연가사용 목표 : '17년 11일 → '18년 13일
- 부서별 이행실적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
 - 전년 대비 초과근무 감축실적 성과 평가 배점 상향 조정 (최대 1점 → 2점)
 - 1인당 평균 연가사용률이 높은 부서, 국내교육 선발 최우선 순위 부여
 - 부서원 및 관리자 연가사용 실적, 성과평가 반영 (지속)

분 야	현 행 (2017)	달라지는 사항 (2018)
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	▶ '18년 국방예산 확보 * GDP 대비 2.4% * 방위력개선비 비중 : 31%	▶ '19년 국방예산 확보 (목표) * GDP 대비 2.5% ↑ * 방위력개선비 비중 : 33% ↑
	▶ 국방재정개혁 추진 * 재정개혁추진단회의 (분기 1회)	▶ 국방재정개혁 개선 * 재정개혁추진단회의 (월 1회) * 대국민 국방재정개혁 아이디어 공모
병 봉급인상	▶ '16년 대비 봉급 9.6% 인상	▶ '17년 대비 봉급 87.8% 인상
군인 공통수당 기본급 산입	▶ 공통수당 (가계지원비, 교통보조비) 별도 지급	▶ 공통수당 (가계지원비, 교통보조비) 기본급 합산
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확대	▶ 신설	▶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(어학·자격취득 등, 2,000명×5만원)
	▶ 신설	▶ 군경험의 대학 학점 인정제 추진 (참여대학 MOU, 표준업무절차 개발)
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급여 보장	▶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	▶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보장
여군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	▶ 초임획득인원 (1,098명)	▶ 초임획득인원 확대 (1,500명)
	▶ 現 군 어린이집 130개소	▶ 군 어린이집 144개소로 증가
	▶ 성폭력 민간상담관 : 현 23명	▶ 성폭력 민간상담관 2배 수준 확대 : 44명
예비전력 정예화	▶ 신 설	▶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(4.6.)
	▶ 소규모 훈련장 (11개) → 과학화 훈련장 통합 (3개)	▶ 소규모 훈련장 (4개) → 과학화 훈련장 통합 (1개)
	▶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(1만원)	▶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(1.6만원)

분 야	현 행 (2017)	달 라 지 는 사 항 (2018)	
장병 보급품 개선	▶장병선호 피복류 보급 * 드로어즈 팬티(1매), 기능성 런닝(2매) * 출타용 가방 최초보급 (전병력 15%이상)	▶장병선호 피복류 확대보급 * 드로어즈 팬티(4매), 기능성 런닝(4매) * 출타용 가방 확대보급 (전병력 35%이상)	
	▶보통탄 방호 가능 방탄복 보급	▶성능 향상된 방탄복 보급 * 철갑탄 방호 가능	
	▶군 일용품 현금지급 (4,000원/월) * 세수비누, 치약, 칫솔	▶군 일용품 현금지급 확대 (5,000원/월) * '17년 대비 1,000원 인상	
	▶신형 전투장구류 보급 * 방탄복, 방탄헬멧, 전투조끼 등 * GOP·예비사단 위주	▶전투지원부대까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 확대	
	▶군 급식비 인상 (7,481원) * 전년대비 147원 (2%) 증액	▶군 급식비 인상 (7,855원) * 전년대비 374원 (5%) 증액	
	▶신설	▶급식혁신사업 확대 * 주말 브런치, 병사식당 외 급식 기회 제공 등	
	▶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(경계병 3매)	▶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확대 (쏜병사 14매)	
방위 사업 개선	효율적 국방획득 체계로 개선	▶신설	▶방위사업개혁 협의회 운영 * 주요 쟁점 협의 및 실행계획 논의 * 학계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
		▶신설	▶획득 전 단계 정보화시스템구축 (~21년) * 정보화 추진 정책연구 (8월) * 시범사업 개념연구 (6월~12월)
	국방 R&D 역량강화	▶신설	▶창의·도전적인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 신설 * 방위사업법 개정(하반기)
		▶신설	▶국방부, 과기부, 산업부, 방위사업청 間 다부처협의체 신설
	방산 경쟁력 확보·산업구조 전환	▶신설	▶국산부품 쿼터제 도입
		▶신설	▶절충교역 사전가치축적제도 도입